

주간 통일정세

2017-06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24	北 주민 상대로 '관광' 사이트 개설... "주문 받아요"(연합뉴스)
	25	北 김정은, 평양 중앙동물원에 불독 등 애완견 전달(연합뉴스)
		北 군부대 내 처음 금씨 부자 동상 건립(연합뉴스) 北 양강도서 간부 억울한 숙청 주장... 당국 검열 착수(연합뉴스)
	26	北 노동당 계획재정부→경제부로 변경(연합뉴스)
		北 예술영화촬영소 설립 70주년... 영화제작 편수는 급감(연합뉴스)
	27	김정은, 강동정밀기계공장 시찰... 종업원 기술교육 강조(연합뉴스)
		조선총련 지방위원장 해임... 조선학교 보조금 논란 책임(연합뉴스)
		北 장거리로켓 '광명성 4호' 발사 1주년 띄우기(연합뉴스)
		北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보유가 정답" 주장(연합뉴스)
	28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대규모 얼음조각축제(연합뉴스)
		北 정규군 창설 69돌... 우리 건드리면 불마당질(연합뉴스)
	29	北 김락겸 전락군사령관 軍행사 불참... 배경에 관심(연합뉴스)
		김정일 생일에 삼지연서 군중대회... 6만 명 참가(연합뉴스)
	210	여명거리 건설현장 사고로 30여명 사상... 최룡해, 수습차 방문(연합뉴스)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각종 행사로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北 김정일 사망 직후 '불순여론' 조사(연합뉴스)
北 'ICBM' 대신 '우주개발' 강조... 배경 주목(연합뉴스)		
경제	24	北 개성공단서 만든 전기밥솥 중국에 내다 팔아(연합뉴스)
	27	북중접경 중지린성 '대북 개방정책' 천명... 북중경협 물꼬 트나(연합뉴스)
	28	北 평화자동차, 2012년 11월 이후 생산분 모두 중국산(연합뉴스)
	29	유엔 대북제재 '구멍'... 北 광물자원, 작년 중수출 11%↑(연합뉴스)
		中 고위간부, 접경지역 개방해야... 북중경협 본격화되나(연합뉴스)
사회 문화	27	北 수해복구지역 남은 민집에 제대군인 강제 입주(연합뉴스)
	28	빵 먹고 식중독, 약은 효과 없어... 北 국산품 외면당해(연합뉴스)
	29	北 대형 교통사고 3번 내면 차량 몰수(연합뉴스) 작년 마-북 교역액 1억6천만 원... 고급차 한대값 불과(연합뉴스)
외교 국방	24	美 방송 "평양과 기대, 국무부에 자금난 호소"(연합뉴스)
	25	英국제전략연구소 "이란 미사일, 北 무수단 가능성 희박"(연합뉴스)

27	갈루치 전 북핵특사, 北에 핵·미사일 도발하지 말라 충고했다(연합뉴스)
	美하원군사위원장, “북·이란 위협 대응, 미사일방어 강화해야”(연합뉴스)
	美글레이저 전 차관보 “北 ‘BDA 여파’ 아직 못 벗어나”(연합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트럼프 정부, 북한제재법 적극 활용해야”(연합뉴스)
	美의회 대북압박 고삐…北 ICBM 규탄·사드배치 결의안 발의(연합뉴스)
	北, 日 재관소 조선학원 보조금 폐소 결정 비난(연합뉴스)
	폴란드, 北대사관의 불법임대 사업에 ‘적법조치’ 예고(연합뉴스)
28	평양서 北외무성·中대사관 친선모임…리진권 대사 참석(연합뉴스)
	러·북 사법협력 강화…푸틴, 대북 형사분야 공조 조약 2건 비준(연합뉴스)
	안보리 보고서, 작년 이집트서 북한산 무기 대량 압수(연합뉴스)
	北, 핵실험 안 해도 시뮬레이션만으로 핵능력 키워(연합뉴스)
29	美의회, 北대비 미사일방어 강화 촉구…사실상 중국도 겨냥(연합뉴스)
	美국무, 군사조치포함 새 대북접근법 마련…‘세컨더리보이콧’도(연합뉴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타격할 공격역량 반드시 강화(연합뉴스)
	美국무부, 北여행경보 갱신…체포·구금 위험(연합뉴스)
	北, 고농축우라늄 280kg확보 추정…핵무기 최대 45개 가능(연합뉴스)
210	美 “北도발, 트럼프 북핵전략에 영향…지금 논의는 시기상조”(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 일자	보 도 내 용	수 행 자	비 고
27.	강동정밀기계공장 방문	조용원·유진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2. 5.

■ 북김정은, 평양 중앙동물원에 불독 등 애완견 전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 중앙동물원에 여러 종(種)의 개를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밝힘.
- 중앙TV는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얼마 전 중앙동물원에 여러 종의 애완용 개들을 보내주셨다”며 이 가운데는 생후 5개월가량의 불독 한 쌍과 사모예드, 비송프리제 등이 있다고 언급함.
- 중앙TV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다”며 김정은을 찬양하기도 함.

2017. 2. 7.

■ 김정은, 강동정밀기계공장 시찰...종업원 기술교육 강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약 2년 1개월 만에 평양의 강동정밀기계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정은은 “제품 전시장을 멋쟁이 건축물로 건설하였으며 보기에도 좋고 다루기 편리하며 성능이 대단히 높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진렬(진열) 해놓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며 “공장의 정밀기계 가공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힘.
- 이번 김정은의 시찰에는 조용원·유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김수길 평양시당위원장과 공장 일꾼들이 이들을 맞이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김정은은 시찰이 끝난 뒤 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2. 7.

■ 조선총련 지방위원장 해임...조선학교 보조금 논란 책임(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가나가와(神奈川)현 이영훈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중순 해임됐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그의 해임은 가나가와현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제시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현내 조선학교 운영 법인측에서 교과서에 담기로 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임.
- 산케이는 “조선학교에 대한 가나가와현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책임을 물어 이영훈 위원장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그동안 조선학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선총련의 주장과 다르다”고 지적함.

2017. 2. 9.

■ 北김락겸 전략군사령관 軍행사 불참·배경에 관심(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부대를 총괄하는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군(軍) 관련 주요행사에 불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림.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7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보고 아래 열린 정규군 창설 69돌 기념 인민무력성 보고회를 8일 방영했음.
- 주석단에는 리명수 군 총참모장, 김광혁 항공·반(反)항공군 사령관, 해군사령관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명식 등 군 고위인사들이 총출동함.
- 그러나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전략군의 사령관 김락겸은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 일각에서는 김락겸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준비 중이어서 불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2017. 2. 10.

■ 여명거리 건설현장 사고로 30여명 사상·최룡해, 수습차 방문(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최근 여명거리 건설현장 시찰은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함.
- 최근 평양시를 방문한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룡해의 여명거리 방문은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였다”며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동원된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RFA에 밝힘.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보고를 받고 즉시 최룡해를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다. 공식행사

2017. 2. 9.

■ **김정일 생일에 삼지연서 군중대회…6만 명 참가(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에 그의 출생지로 선전하는 백두산 동남쪽 기슭 삼지연에서 대규모 군중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백두밀영답사행군대의 인원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며 “이들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합세해 2월 16일 김정일의 생가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른다”고 RFA에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전국 청소년·학생들로 구성된 백두산밀영 답사행군대가 지난 6일 삼지연혁명전적지를 답사한 데 이어 지난 7일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를 참관했다고 보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2. 4.

■ **北, 주민 상대로 ‘관광’ 사이트 개설… “주문 받아요”(연합뉴스)**

-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메아리가 4일 보도함.
- 매체는 이날 “인민들이 나라의 명승지들과 력사(역사)문화유적들, 명소들에 대한 참관과 유람관광을 통하여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홈페이지(페이지) ‘관광’을 새로 개설하였다”고 소개함.
-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관광총국은 북한의 관광사업 전반에 대해 정책적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평양여행안내소와 조선관광안내사, 관광선전통보사 등을 운영하고 있음.

2017. 2. 5.

■ **北, 군부대 내 처음 숯배 부자 동상 건립(연합뉴스)**

- 북한이 군부대 안에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건립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RFA는 미국 상업위성이 최근 촬영한 북한 평안남도 덕천 제630연합부대 산하 군부대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꾸준히 계속된 우상화 작업의 하나”라면서 “평양은 물론 전국 각도의 행정중심지와 학교, 과학원 등 주요 건물에 이어 군부대까지 김 부자의 동상을 건립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함.

■ 北양강도서 간부 억울한 숙청 주장…당국 검열 착수(연합뉴스)

- 북한 양강도에서 도당 간부가 억울하게 숙청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북한 당국이 이 지역에 대한 집중 검열에 들어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RFA가 인용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당 선전부장은 지난해 양강도 대홍단군의 ‘김정일 말씀비’ 앞에서 문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숙청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난해 11월 현지 시찰을 앞두고 사전 답사에 나선 선전부장이 ‘대홍단은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적힌 비석 앞에서 “살기 좋기는 무슨…”이라고 말했다는 것임. 그러나 당시 답사에 동행한 간부들이 뒤늦게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억울한 숙청이라는 신고가 중앙당에 접수되면서 검열이 이뤄지게 됐다고 소식통은 전함.
- 이번 검열은 방식이나 투입 인력의 규모로 볼 때 주민 통제, 탈북 방지나 지방 권력기관에 대한 중앙의 통제 강화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RFA는 덧붙임.

2017. 2. 6.

■ 北, 노동당 계획재정부→경제부로 변경(연합뉴스)

- 북한이 국가의 경제 예산을 책정하고 총괄하는 노동당 계획재정부의 명칭을 경제부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고위 소식통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노동당 계획재정부가 경제부로 변경됐다”며 “수장은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당 계획재정부는 국가의 경제 예산 편성과 기획 업무를 관장했을 뿐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는 내각의 관련 부처들이 담당해왔음.

■ 北 예술영화촬영소 설립 70주년…영화제작 편수는 급감(연합뉴스)

- 최근 영화 분야에서 침체를 겪는 북한이 6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창립 70주년을 맞아 영화인들에게 ‘명작 창작’을 독려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과 3면에 각각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기사와 전날 진행된 기념보고회 관련 기사를 실었음.

- 김영철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초급당위원장은 기념보고회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명작 창작 성과로 받들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을 앞당기는 데 적극 이바지’할 것을 독려했다고 신문은 전함.

2017. 2. 8.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대규모 얼음조각축제(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2월16일, 광명성절)을 앞두고 대규모 얼음조각축제를 마련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광명성절 경축 얼음조각축전(축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6일 삼지연군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고 보도함.
- 올해로 12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얼음 860t, 눈 1천960t, 물은 1천이 동원됐다고 신문은 덧붙임.

2017. 2. 10.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각종 행사로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2월16일, 광명성절)을 앞두고 각종 행사를 통해 경축 분위기 조성에 나섬.
- 북한 평양방송은 광명성절 경축 영화상영주간 행사 개막식이 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10일 보도함.
- 행사에는 박춘남 문화상,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봉석 평양시 당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 北, 김정일 사망 직후 ‘불순여론’ 조사(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사망 직후 ‘불순한 여론’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고 북한 민주화운동 단체인 ‘조선개혁개방위원회’가 북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10일 밝힘.
- 북한에서 2012년 2월 작성된 이 문건에 따르면 남포 교도사단 산하 포병연대 보위부는 2011년 12월 22일 김정일 애도 기간에 특이동향과 관련한 조사를 벌임.
- 자료에는 “포병연대 보위부장은 지난해(2011년) 12월 22일 저녁 주변에서 제기된 ‘불순한 여론 출처’를 밝히기 위해 사회보안기관들과 연계 밀에 요해(사정이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아봄) 사업을 진행했다”고 적혀 있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2. 7.

■ 北, 장거리로켓 ‘광명성 4호’ 발사 1주년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2월 7일 성공한 장거리 로켓(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 ‘광명성 4호’ 발사 1주년을 맞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킴.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지구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날아오른 때부터 한해가 흘렀다”며 “광명성-4호 발사의 대성공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당당한 우주 강국으로서의 지위에 더 높이 올라섰다”고 분위기를 띄웠음.
- 신문은 “쏘련(소련)이 첫 인공지구위성 ‘스뽀뜨니크’(스푸트니크) 1호를 쏘올린 때로부터 오늘까지 세계적으로 발사한 인공지구위성은 8천여개나 된다”면서 “하지만 자기의 운반 로켓(로켓)로 자기의 발사장과 발사대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0개 나라밖에 없다”고 자찬함.

■ 北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보유가 정답”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7일 자국의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국을 향해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 보유가 정답”이라고 주장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핵 참화를 들쭉하기 위해 미쳐 날뛰는 핵전쟁도발의 원흉이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 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강변함.
- 중앙통신은 “남조선에 전개된 미국의 핵무기들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그를 발판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침략수단, 제패수단”이라고 주장함.

2017. 2. 8.

■ 北, 정규군 창설 69돌…우리 건드리면 불미당질(연합뉴스)

- 북한은 정규군 창설 69돌(8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김씨 3부자의 군(軍) 관련 업적을 찬양하면서 대남(對南) 위협을 쏟아냄.
- 북한은 정규군 창설 69돌 기념 인민무력성 보고회를 7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보도함.
-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보고를 통해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된 것은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정규무력 건설사상과 노선의 빛나는 승리”라고 강조함.

2017. 2. 10.

■ 北, 'ICBM' 대신 '우주개발' 강조...배경 주목(연합뉴스)

- 북한 관영 매체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무력 과시 등 군사적 도발 위협과 관련된 표현과 주장을 줄이는 대신 우주개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어 배경이 주목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우주를 정복하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장거리 로켓을 계속 쏘아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힘.
- 노동신문은 또 ‘우리의 우주 정복의 길은 곧 혁명의 길, 자주의 길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7. 2. 4.

■ 北, 개성공단서 만든 전기밥솥 중국에 내다 팔아(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남한 기업이 남겨두었던 전기밥솥을 최근 중국에 내다 팔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중국 변경 도시의 대북 소식통은 RFA에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남한의 유명 상표 전기압력밥솥을 중국에 내다 팔았다”면서 “개성공단에 남겨진 남한 제품을 북한이 내다 판 시점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이며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한 기업들이 생산한 재고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 상당량의 상품이 현지에 남아있다고 방송은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2. 7.

■ 북중접경 中지린성 ‘대북 개방정책’ 천명…북중경협 물꼬 트나(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이 새해 들어 대북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북중경협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머리를 들고 있음.
- 7일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진흥동북망(振興東北網)에 따르면 지린성 정부는 최근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선도구 전략 실시소조 전체회의를 소집, 올해 중점 추진사업계획을 통과시킴.

2017. 2. 8.

■ 北 평화자동차, 2012년 11월 이후 생산분 모두 중국산(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잇단 핵실험 등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으나 정작 내수경제가 매우 뒤떨어져 민수 차량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중국 참고소식망이 8일 보도함.
- 이 매체는 독일 출신으로 중국자동차시장 전문가인 에리히 폰 잉거 씨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아직 스스로 민간용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으며 대안으로 중국산을 사용한다”고 전함.
- 참고소식망은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 매체로 여타 관영 매체가 직접 보도하기 어려운 주제를 전문가·외신 인용을 통해 전하며 북한에 대해 핵실험·미사일 도발에 치중하기보다 경제발전에 힘쓰도록 주문한 것으로 풀이됨.

2017. 2. 9.

■ 유엔 대북제재 ‘구멍’…北광물자원, 작년 中수출 11%↑(연합뉴스)

- 지난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북한의 주요광물 중국 수출은 증가함.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7일 내놓은 ‘2016년 북·중 광산물 수출입 동향보고’에서 지난해

북한 주요광물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14억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고 밝힘.

- 광물자원공사 이인우 남북자원협력실장은 “유엔의 다자적 제재결의에 대해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 광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함.

■ 中 고위간부, 접경지역 개방해야··북중경협 본격화되나(연합뉴스)

-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 기구의 고위 간부가 북한 등 접경지역에서의 경제벨트 구축을 통한 대외개방을 강조하고 나섬.
- 9일 중국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발개위 산하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사(이하 진흥사) 창슈쩌(常修澤) 부주임은 최근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의 통칭)이 발전하려면 북한 등과의 경제통로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함.
- 이는 그러나 북한 핵실험 도발 등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 등 외교적 정세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중국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2. 7.

■ 北, 수해복구지역 남는 빈집에 제대군인 강제 입주(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수해 복구 지역에 빈집이 남아돌자 제대한 군인들을 무리하게 입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 평양 주민은 RFA에 “당국이 함경북도 수해지구에 제대군인을 무리하게 배치해 입주시키고 있다”며 “북부지역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제대군인들은 날씨가 풀리는 3월께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2017. 2. 9.

■ 北, 대형 교통사고 3번 내면 차량 몰수(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대형 사고를 3차례 이상 낸 차량은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북한 평안북도 소식통은 RFA에 “이 포치(조치)가 내려온 시점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이 시작된 지난해 12월경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소식통은 “이번 조치로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해 국가기업소 이름으로 등록한 다음 돈벌이를 하고 있는 개인 차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운 나쁘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 날씨가 나쁘거나 도로사정이 열악한 경우 장거리 운행은 가급적 피하려 한다”고 덧붙임.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2. 8.

■ 빵 먹고 식중독, 약은 효과 없어…北국산품 외면당해(연합뉴스)

- 북한의 일부 공장·기업소들이 버젓이 불량 식의약품을 생산하면서 국산품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혜산기초식품 공장에서 생산된 효모 빵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와 두드러기가 돋는 증상이 나타나 도 위생방역소와 인민위원회 품질감독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RFA에 밝힘.
- 이 소식통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250g 짜리 효모 빵은 강냉이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것”이라며 “값이 북한 돈 6백 원으로 저렴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사 먹어 장마당에서 흔히 ‘대학생빵’으로 불린다”고 설명함.

2017. 2. 9.

■ 작년 미·북 교역액 1억6천만 원…고급차 한대값 불과(연합뉴스)

- 지난해 미·북 교역액이 고급 자동차 한 대 가격인 약 1억6천만원으로 집계됨.

- 9일 미국 상무부 산하 통계국(US Census Bureau)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북 교역액은 총 13만9천334달러(약 1억6천만 원)로, 이는 2015년 교역액수인 475만1천721달러의 2.9% 수준임.
- 미국과 북한의 교역이 10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여파로 양국 교역이 없었던 2006년을 제외하면 1992년 이후 24년 만임.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2. 4.

■ 美 방송 “평양과기대, 국무부에 자금난 호소”(연합뉴스)

- 북한 평양과기대 운영진이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대북제재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함.
-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은 지난 1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위당국자를 면담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인도주의 사업과 교육 활동 등을 대북제재 예외로 뒀지만, 미국 내 은행들은 최근 평양과기대에 대한 송금을 더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함.
- 김 총장은 “평양과기대 지원은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 재무부의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했지만, 미국 내 거래은행 계좌가 동결 절차를 거쳐 폐쇄됐다”면서 “계좌 폐쇄로 미국 내 지원재단을 통해 전달되는 학교 운영비는 물론 외국인 교수 생활비와 의과대학 건설(신설) 자금 등의 반입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설명함.

2017. 2. 7.

■ 갈루치 전 북핵특사, 北에 핵·미사일 도발하지 말라 충고했다(연합뉴스)

- 지난해 10월 말 열린 쿠알라룸푸르 북·미 비공식 접촉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가 북한에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핵·미사일 시험과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힘.
- 갈루치 전 특사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7일 열리는 북한 문제 청문회 출석에 앞서 미리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당시 북한에 조언할 기회가 있어서, 미래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핵·탄도미사일 시험이나 미국과 동맹에 도발하려 들지 말라고 북한에 충고했다”고

말함.

■ 美하원군사위원장, “북·이란 위협 대응, 미사일방어 강화해야”(연합뉴스)

-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따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공화 텍사스)이 6일(현지시간) 말함.
- 손베리 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여러분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일에 주목하고자 한다면, 나는 이란과 북한을 언급하고 싶다”면서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미사일 기술은 제자리에 멈춰있는 게 아니다. 세계 다른 국가들은 막기 어려운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면서 미국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장하고 기술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함.

■ 美글레이저 전 차관보 “北, ‘BDA 여파’ 아직 못 벗어나”(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여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전직 고위관리의 주장이 나왔음.
- 대니얼 글레이저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함.
- 글레이저 전 차관보는 “북한이 아직도 2005년 이전 수준으로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임.

■ 美하원 외교위원장 “트럼프 정부, 북한제재법 적극 활용해야”(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된 북한제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 대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함.
-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하원 외교위가 주최한 북한 문제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북한제재법을 더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힘.
- 로이스 위원장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아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중심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굳건한 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과도기에도 지속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함.

■ **美의회 대북압박 고삐…‘北 ICBM 규탄-사드배치 결의안’ 발의(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북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음.
-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잇따라 북핵 청문회를 열어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이와 별개로 하원이 초당적 대북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북한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고 나섬.
- 결의안에는 북한의 ICBM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재확인,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협력 공약 재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지 등의 내용도 담겼음.

2017. 2. 9.

■ **美의회, 北대미 미사일방어 강화 촉구…사실상 중국도 겨냥(연합뉴스)**

-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 8일(현지시간) 보수성향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에 따르면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미사일방어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한 고위 관리는 워싱턴 프리비컨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지속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음을 시사해 왔다. 그는 공격용, 방어용 미사일 능력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를 보면 의원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함.

■ **美국무, 군사조치포함 새 대북접근법 마련…‘세컨더리 보이콧’도(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이와 함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과 그들을 돕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여, 트럼프 정부가 초강력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함.
-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위험한 길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하는 것만이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에게 북한 정권이 더는 지역과 국제 안보 기반을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함.

■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타격할 공격역량 반드시 강화(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브룩스 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미 육군협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사일방어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방어공약과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브룩스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서 다층방어망 구축을 위해 3각 공조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임.

■ **美국무부, 北여행경보 갱신...체포·구금 위험(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경보를 3개월 만에 갱신해 자국민에 북한여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국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갱신한 북한 여행경보를 통해 “북한의 사법체계 아래서 미국인이 여행 도중에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국무부는 또 지난 10년 동안 최소 14명의 미국인이 개인 또는 단체로 북한을 여행하다 당국에 억류됐다고 지적함.

2017. 2. 10.

■ **美 “北도발, 트럼프 북핵전략에 영향...지금 논의는 시기상조”(연합뉴스)**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전략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9일(현지시간) 밝힘.
-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전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을 향해 도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함.
- 특히 그는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나. 북·중 관계

2017. 2. 8.

■ **평양서 北외무성-中대사관 친선모임...리진진 대사 참석(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지난 7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과 새해 친선모임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함.

- 이 모임에는 리진권(李進軍) 주북 중국 대사,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 등 중국대사관 관계자들과 북한 외무성 일꾼들이 참석했다고 신문은 밝힘.
- 이번 모임은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중관계가 격화되는 가운데 한동안 냉랭했던 북중 간 관계개선 움직임 측면에서 주목됨.

다. 북·일 관계

2017. 2. 7.

■ 北, 日 재판소 조선학원 보조금 패소 결정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오사카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를 비난하고 나섬.
- 북한의 해외지원단체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일본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이번 판결을 준렬히(준열히) 단죄 규탄한다”며 “이번 부당한 판결은 일본 특유의 민족배타주의 정책과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정책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담화는 “조선학교는 일본당국의 승인 밑에 운영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라며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로 보나 일본의 국내법으로 보나 일본은 응당 채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보장할 도의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

라. 북·러 관계

2017. 2. 8.

■ 러 북 사법협력 강화…푸틴, 대북 형사분야 공조 조약 2건 비준(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 간 형사 분야 공조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음.
- 크렘린궁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최종 비준했다고 밝힘.
- 크렘린궁 법률 정보사이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월과 2월 각각 하원과 상원 비준 동의 절차를 통과한 두 조약을 최종 비준하는 법률에 서명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2. 7.

■ 폴란드, 北대사관의 불법임대 사업에 '적법조치' 예고(연합뉴스)

- 폴란드 정부가 자국에서 불법 임대 활동을 하는 북한대사관에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VOA는 폴란드 외교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왔다고 밝힘.
- 북한이 외교공관을 이용해 불법 임대 이익을 거두는 나라는 폴란드를 비롯해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드러난 곳만 4개국이라고 VOA는 설명함. 이들 국가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친 상태라고 VOA는 덧붙임.

2017. 2. 8.

■ 안보리 보고서, 작년 이집트서 북한산 무기 대량 압수(연합뉴스)

- 지난해 8월 이집트에 기항한 선박에서 북한산 무기가 대량 발견돼 유엔과 이집트 당국에 압수됐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탄약류 등 당시 압수한 무기의 양이 사상 최고치였다고 전함.
- 그러면서 통신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등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재 망을 피해 대규모 무기거래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2. 5.

■ 영국국제전략연구소 “이란 미사일, 北무수단 가능성 희박”(연합뉴스)

- 이란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BM-25)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영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함.
-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SS) 미사일 방어 분야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엘레먼은 4일(현지시간)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이 북한 무수단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힘.
- 엘레먼은 “만약 지난 1월 시험 발사된 이란 미사일이 (무수단과 같은) R-27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란이 북한과 긴밀한 미사일 협력을 지속할 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동식, 2단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한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그러한 개발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지 않으며, 4~5년간의 관측 비행 시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2017. 2. 8.

■ 北, 핵실험 안 해도 시뮬레이션만으로 핵능력 키워(연합뉴스)

-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핵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의 핵 능력에 정통한 군의 한 관계자는 8일 “북한은 5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군이 핵실험을 더 하지 않더라도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느 정도 핵무기의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됐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핵실험의 의미는 자신들이 만든 장치가 디자인한 대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인 위력을 과시하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2017. 2. 9.

■ 北, 고농축우라늄 280kg 확보 추정...핵무기 최대 45개 가능(연합뉴스)

-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Pu) 52kg과 고농축우라늄(HEU) 280kg의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됨.
-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국제 콘퍼런스에 앞서 배포된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전망함.
- 원자로 등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플루토늄과 달리 HEU는 소규모 시설에서 은밀하게 생산할 수 있어 군 당국도 북한의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지 못하고 있음.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2.5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이르면 이달 중순 회동(연합뉴스)	
	2.7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달 중순 독일서 열릴 듯(연합뉴스)	한미외교장관 통화...틸러슨, 임박한 위협 북핵에 공동접근하자(연합뉴스)
		2.9	외교부 “美의회 대북결의안, 北위협 초당적 입장 반영”(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2.4		中, 韓에 사드 배치일정 연기 종용...차기 정권서 취소 노림수(연합뉴스)
	2.6	정부, 중국 반독점법 강화 한국 겨냥 아니다(연합뉴스)	中외교부, 사드 반대 향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2.7	
	2.8	北 관매시도 개성공단제품 사지 말라...통일부, 中에 요청(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2.6		日관방, 주한대사 귀임일 아직 미정...한일갈등 장기화 예고(연합뉴스)
	2.7	외교부, 앞으로도 계속 ‘소녀상’ 명칭 사용(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또 부정하는 日, 기록 없다며 오리발(연합뉴스)
	2.8		日관방, 주한대사 귀국 장기화에도 대북공조 문제없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7		주한 러 대사 “사드, 北핵미사일 위협 억제 목적 넘어서는 것”(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2.4		中, 다오위다오는 우리 영토...미국방 '日센카쿠 발언'에 반발(연합뉴스)
			中 "미국무, 달라이라마와 회동 시사... 골칫거리만 생길 것" 발끈(연합뉴스)
	2.5		인민일보 "금권정치, 美사회 고질병... 中특색사회주의 우월" 강조(연합뉴스)
	2.6		中 "남중국해 문제, 외교로 풀자"...美에 유화적 접근(연합뉴스)
	2.7		中 언론 "미국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 중·러 핵억제 목표"(연합뉴스)
2.8	매티스 美국방 "中, 명나라 왕조처럼 군다...지금은 안 통해"(연합뉴스)		
			中왕이, 외국대체가 남중국해 갈등 부추겨...미중대립에 승자 없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2.4	美日 국방, 北미사일 개발·中남중국해 진출 대비 연대강화(연합뉴스)	
			미일 공동개발 차세대 요격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연합뉴스)
	2.6	日재무장 밀어주는 美...'양날의 칼' 던진 매티스 한일순방(연합뉴스)	
	2.7	미일 외무장관 통화...'센카쿠 미국 방위 대상' 확인(연합뉴스)	
2.10	트럼프, 시진핑과 취임 후 첫통화...'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2.5	트럼프 또 푸틴 감싸기...미국도 그다지 결백하진 않아(연합뉴스)	
	2.9	美 "크림병합 관련 러시아 제재 해제 안 한다" 거듭 확인(연합뉴스)	

	2.10	美상원 러시아 청문회...여도 야도 '푸틴 두둔' 트럼프 비판(연합뉴스) 트럼프, 푸틴 통화서 "미러 핵군축, 나쁜 협상"...통화 또 유출(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2.5	"산카쿠는 美방위대상" 발언에 中 3일째 산카쿠 주변서 어슬렁(연합뉴스)	
	2.6	'뜨거워지는' 동중국해...日·中·대만 3국 산카쿠분쟁 '기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2. 5.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이르면 이달 중순 회동(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 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은 지난달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점검하고자 이달 중순께 워싱턴D.C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회동이 열리면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참석함.

2017. 2. 7.

■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달 중순 독일서 열릴 듯(연합뉴스)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 중순 독일에서 열릴 것으로 보임.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신임 미국 국무장관 사이의 첫 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 조율을 위해서 현재 미측과 협의 중에 있다”며 “현재로써는 2월중 독일에서 개최되는 다자회의 계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함.
- 이에 따라 윤 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16~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또는 17~19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식 양자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보임.

■ 한미외교장관 통화…틸러슨, 임박한 위협 북핵에 공동접근하자(연합뉴스)

- 한·미는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한 외교장관 간 통화에서 북핵을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동의 접근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신임 국무장관은 7일(한국 시간) 오전 7시 50분부터 이뤄진 약 25분간의 통화에서 이같이 뜻을 같이함.
- 윤 장관은 “지난 20년간 한·미 양국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핵 문제가 미국 신행정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외교안보 현안이 될 것”이라며 “양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2017. 2. 9.

■ 외교부 “美의회 대북결의안, 北위협 초당적 입장 반영”(연합뉴스)

- 외교부는 8일 최근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결의안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미국 의회 내의 초당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지속 강화 필요성에 대한 미국 의회 차원의 확고한 인식과 지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함.

■ 틸러슨 미국무 “한국, 방위비 이미 ‘많이’ 부담하고 있다”(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 틸러슨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됨.
- 틸러슨 장관은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카딘 의원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large amounts)을 기여하고 있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2017. 2. 4.

■ 中, 韓에 사드 배치일정 연기 종용…차기 정권서 취소 노림수(연합뉴스)

-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해 온 중국이 최근 한국에 사드 배치 일정을 연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국 외교관은 한국과 미국이 작년 7월 초 사드 배치에 합의한 이후 중국 외교부 관리들과의 협상 시도가 거절당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 행정부가 최순실 관련 부패 스캔들로 뒤흔들린 이후 중국의 태도가 변했다고 말함.
- 이 외교관은 “중국 외교관들이 현재 우리와 사드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며 “그들이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했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지만 너무 빨리 배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함.

2017. 2. 6.

■ 정부, 중국 반독점법 강화 한국 겨냥 아니다(연합뉴스)

-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중국이 반독점법을 강화한 것이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 또한, 중국 내 일부 롯데슈퍼의 폐점과 법무부의 중국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이 없다고 봤음.
- 정부 소식통은 6일 중국이 반독점법을 강화해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을 조준하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폴크스바겐 등 중국 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는 중에 필요한 법에 대해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정조준은 말이 안 된다”면서 “중국은 반독점법이 있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함.
- 중국 정부는 최근 반독점법 세부 규정을 제정·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반독점 조사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6부 반독점 지침이 공개·시행될 예정임.

■ 中외교부, 사드 반대 향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향후에도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나 미·일 안보조약이 냉전 시대 산물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사일 방어 문제는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 및 대국간 상호 신뢰에 관련된 것인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각국은 자국의 안전 및 이익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안전 우려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사드 문제에 대해선 중국 입장은 변함없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함.

2017. 2. 7.

■ 中,한국산 화장품 또 대거 수입 불허...김 쌀 라면도 포함(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산 화장품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품질 불량으로 대거 수입이 불허된 것으로 확인됨.
- 7일 중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최근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을 발표했는데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68개 품목 중 19개가 오피 등 한국산 화장품이었음.
- 해당 한국산 화장품만 2.5t으로 질검총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수입 화장품 물량의 52%에 달함.

2017. 2. 8.

■ 北 판매시도 개성공단제품 사지 말라...통일부, 中에 요청(연합뉴스)

- 통일부는 8일 북한이 판매를 시도하는 개성공단 제품을 중국 측이 구매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힘.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측의 관계기관이 밥솥 등 (개성공단)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제품은 우리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래서 중국 쪽이나 관련되는 쪽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구매하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함.
- 우리 정부는 북측 관계기관이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남한 기업이 남겨뒀던 완제품의 사진을 가지고 중국 쪽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짐.

다. 한·일 관계

2017. 2. 6.

■ 日관방, 주한대사 귀임일 아직 미정...한일갈등 장기화 예고(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6일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지난달 9일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문제와 관련해 “귀임일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은

- 앞으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함.
-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이 곧 한 달이 되는 상황에서 스가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그의 일시귀국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2017. 2. 7.

■ 외교부, 앞으로도 계속 ‘소녀상’ 명칭 사용(연합뉴스)

- 정부는 7일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이라는 명칭 대신 ‘위안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소녀상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소녀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조 대변인은 이어 “소녀상은 명칭 여부와는 별도로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위안부 합의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답함.

■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또 부정하는 日, 기록 없다며 오리발(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또 부정함.
- 스가 장관은 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했던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듯한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미국 CNN에서 전시 중 일본군이 여성 20만 명을 성 노예로 삼았다는 보도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질문받자 “이전부터 국회의 장에서 정부가 답변해 온 것과 같다”며 이같이 답함.

2017. 2. 8.

■ 日관방, 주한대사 귀국 장기화에도 대북공조 문제없다(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8일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귀국 장기화에도 한미일 대북공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나가미네 대사의 일시귀국 장기화에 따라 한일 간 대북 협력에 영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각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연대는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함.

-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나가미네 대사의 조기 귀환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해석됨.

라. 한·러 관계

2017. 2. 7.

■ 주한 러 대사 “사드, 北핵미사일 위협 억제 목적 넘어서는 것”(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또다시 경고하고 나섬.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7일(현지시간) 자국 ‘외교관의 날’을 앞두고 타스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사드 시스템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목적을 넘어서는 미국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러시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함.
- 티모닌 대사는 앞서 3일 서울 러시아대사관에서 한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도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 자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2. 4.

■ 中, 다오위다오는 우리 영토…미국방 ‘日센키쿠 발언’에 반발(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중국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4일 논평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관계는 아태지역의 안보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함.
- 신문은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것이지 아시아 전체의 공동 이익을 확대한다”며 “한미관계가 다른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고, 공동 안보 실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中 “미국무, 달라이라마와 회동 시사…골칫거리만 생길 것” 발끈(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첫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엑손모빌 최고경영자 출신 렉스 틸러슨이 국회 인준 과정에서 달라이라마와 회동을 시사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
- 대만문제와 무역 불균형, 남중국해 갈등 등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와중에 티베트 문제도 중국과 미국의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 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인준 전 상원 외교위원회의 ‘시짱(西藏·티베트) 문제’와 관련한 서면 질의에서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앞으로 종교신앙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밝힘.

2017. 2. 5.

■ 인민일보 “금권정치, 美사회 고질병…中특색사회주의 우월” 강조(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5일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을 비판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구축한 이른바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나섬.
- 인민일보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우치(周琪) 칭화(淸華)대 국가전략연구원 집행원장 등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게재함.
- 저우치 집행원장은 ‘금권정치는 미국사회의 고질병’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이 줄곧 스스로를 민주정치의 모델이라고 자부하지만 미국 국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혼란상을 볼 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 정치체제 메커니즘의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함.

2017. 2. 6.

■ 中 “남중국해 문제, 외교로 풀자”…美에 유화적 접근(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자, 중국 정부가 군사적 대립이 아닌 외교방식으로 문제를 풀자고 주장하고 나섬.
- 이는 중국이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려는 미국에 대해 무력 충돌까지도 언급하며 위협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분위기로, 미중 대화 용의를 내비친 것으로 보임.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매티스 장관이 방일 기간

남중국해에 대규모 군사 행동이 필요 없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현재 남중국해에는 사실 아무 일이 없으며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고 유관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을 제어하고 있다”고 말함.

2017. 2. 7.

■ 中 언론 “미국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 중·러 핵억제 목표”(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발사 실험 성공은 전 세계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야심이자 중국과 러시아 핵 억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7일 보도함.
-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이번 실험은 세계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야심 찬 계획의 일부분”이라며 “멀리 내다보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목적과 상응한다”고 지적함.
- 신문은 “일단 해상배치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완성되면 중국에 군사 위협이 될 것”이라며 “또 미국이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전 세계 미사일방어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억제에 있다”고 강조함.

2017. 2. 8.

■ 매티스 美 국방 “中, 명나라 왕조처럼 군다…지금은 안 통해”(연합뉴스)

- 이달 초 일본을 방문했던 제임스 매티스 미국방장관이 ‘명(明) 왕조’, ‘책봉정책’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며 중국을 비판했던 것으로 알려짐.
- 8일 니혼케이자인신문에 따르면, 방대한 독서량을 자랑하는 그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중국은 명 왕조의 책봉정책을 부활하려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그러면서 “주변을 모두 자기 세력권에 넣으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고 함.

■ 中왕이, 외국매체가 남중국해 갈등 부추겨…미중대립에 승자 없다(연합뉴스)

- 외국 매체들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비난함.
- 8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호주 캔버라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뒤 이같이 밝힘.

- 그는 이런 상황에서 역외국가들이 해야 할 일은 이를 마땅히 지지하는 것이지 반대해서는 안된다면서,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배치는 현 단계에서 불필요하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7. 2. 10.

■ 트럼프, 시진핑과 취임 후 첫통화…‘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첫 전화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존중 의사를 밝힘.
- 10일 AP, AFP 통신과 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새해 축하 메시지에 감사하고, 중미 관계가 상호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함.
-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중미 관계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양국 협력을 강조함.

나. 미·일 관계

2017. 2. 4.

■ 美日 국방, 北미사일 개발·中남중국해 진출 대비 연대강화(연합뉴스)

- 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4일 도쿄(東京)의 방위성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대비해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음.
- 이들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역 안정의 중요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해 안전보장 상의 우려를 표시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기로 함.
- 매티스 장관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인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 즉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 미일 공동개발 차세대 요격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연합뉴스)

- 일본 방위장비청은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의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고 4일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이날(일본시간) 미국 하와이 먼바다에서 'SM3블록2A'의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 해상의 미군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상공에서 이동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함.
- 'SM3블록2A'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됨.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 'SM3블록1A'의 개량형임.

2017. 2. 6.

■ 日재무장 밀어주는 美...‘양날의 칼’ 던진 매티스 한일순방(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보름여 만에 ‘신(新) 냉전’으로 불리는 동북아의 갈등 구도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음.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2~4일 한일 연쇄 방문은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제고를 확인한 면에서 긍정적이었지만, G2(미중)을 축으로 한 동북아 갈등의 단층을 한층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옴.
-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연내 배치에 ‘대못’을 박는 한편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고, 일본에서는 일본 방위비 확대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함.

2017. 2. 7.

■ 미일 외무장관 통화...‘센카쿠 미국 방위 대상’ 확인(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7일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함.
- 외무성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에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이를 위해 두 사람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하기로 함.
- 텔러슨 장관은 기시다 외무성에 이어 이날 오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도 통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짐.

다. 미·러 관계

2017. 2. 5.

■ **트럼프 또 푸틴 감싸기…미국도 그다지 결백하진 않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살인자’임에도 존경하겠느냐는 질문에 “푸틴을 존경한다”며 또다시 그를 감싸고 나섬.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진행자 빌 오라일리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도 살인자가 수도 없이 많다”며 “우리나라는 그렇게 결백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함.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2월 20일 미국 ABC방송에 나와서도 푸틴 대통령을 둘러싼 언론인 살해 의혹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지만 나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며 푸틴 대통령을 두둔했음.

2017. 2. 9.

■ **美 “크림병합 관련 러시아 제재 해제 안 한다” 거듭 확인(연합뉴스)**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한 대러 제재를 당분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힘.
- 타스 통신에 따르면 손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과 관련한 미국의 대러 제재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함.
- 그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앞서 유엔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러시아가 크림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제재해제 문제는 검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2017. 2. 10.

■ **美상원 러시아 청문회…여도 야도 ‘푸틴 두둔’ 트럼프 비판(연합뉴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 청문회’를 열고 미국과 러시아의 향후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이날 청문회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친(親) 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음.
- 코커 위원장은 “나 역시 우리 자신의 행위와 러시아 행위 사이에 도덕적 동등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상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함.

■ **트럼프, 푸틴 통화서 “미러 핵군축, 나쁜 협상”…통화 또 유출(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군축 협정 관련 전화내용이 보도되면서 정보 유출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음.
-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3명의 전·현직 미국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푸틴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2010년 체결된 신(新)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미국에 나쁜 협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스파이서 대변인은 백악관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함.

라. 중일 관계

2017. 2. 5.

■ “센카쿠는 美방위대상” 발언에 中 3일째 센카쿠 주변서 어슬렁(연합뉴스)

- 미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미국의 방위 대상임을 밝힌 가운데 중국의 해경 선박이 3일 연속 센카쿠 주변 지역에서 시위성 항해를 했음.
- 5일 NHK에 따르면 이날 중국 해경국 함선 3척이 센카쿠열도 일본 영해의 바로 바깥쪽 접속수역(영토에서 22~44km)을 항해했다. 오전 9시 현재 이들 선박은 센카쿠열도 구마시마(久場島) 서북서쪽 30km 지점에 접근함.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측 함선들에 영해에 접근하지 말도록 경고함.
-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 밤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 영토이며 이는 왜곡할 수 없는 역사 사실”이라며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 시대 산물이며 중국의 영토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음.

2017. 2. 6.

■ ‘뜨거워지는’ 동중국해…日·中·대만 3국 센카쿠분쟁 ‘가열’(연합뉴스)

- 최근 일본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미·일 동맹에 따른 미국 방위대상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일본·중국·대만의 다툼이 가열되고 있음.
- 중국은 해경선을 센카쿠에 보내 일본을 지속해서 자극하고 있고, 대만이 중국과 일본 간 분쟁에 끼면서 분쟁은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6일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잇따라 들어온 것이 일본 해상보안본부에 의해 확인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2.6	러시아서 근 20년 도피생활해온 北 노동자 강제송환 위기(연합뉴스)
	2.7	유럽인권재판소 “러 정부, 탈북 노동자 최씨 강제송환 안돼”(연합뉴스)
		러시아, 탈북자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송환 중단해야(연합뉴스)
		북한인권 고발 다류 ‘퍼스트 스텝’ 10일 국내 첫 시사회(연합뉴스)
	2.8	남북피해단체들, 184명 통합 명단 발표(자유아시아방송)
	2.9	미 국무부, 탈북자 강제송환 보도에 “북한 난민 처우 깊이 우려”(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2.9	北 아동 노동착취 실태 유엔 실무회의서 논의(연합뉴스)
	2.10	영국 외무부 “북한 당국, 주민 기본 인권 계속 무시”(미국의소리)
		미국무부, 北노동자 해외파견 관행 좌시하지 않겠다(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유엔, 북한은 ‘잊힌 위기국가’…지원 절실(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2.7	탈북자단체, 장성택 사건으로 1천명 처형·2만 명 숙청(연합뉴스)
탈북자 국군포로	2.8	탈북 여성, ‘18호 수용소’내 인권유린 실태 첫 고발(연합뉴스)
	2.8	탈북 난민 1명 지난달 美입국…2006년 이후 212명(연합뉴스)
대북지원	2.7	유니세프, 올 대북지원 1,650만 불 요청(자유아시아방송)
	2.8	북한 1인당 식량배급량 400g…유엔 권장량의 67%(연합뉴스)
	2.10	美 구호단체, 북한에 17억 원 상당 의약품 지원(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2. 6.

■ 러시아서 근 20년 도피생활해온 北 노동자 강제송환 위기(연합뉴스)

-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온 북한인 노동자가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현지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함.
-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온라인 신문 ‘폰탄카’에 따르면 이 도시에서 숨어 지내던 최명복이란 북한 노동자가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그의 송환 판결을 내림.
-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2월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북한이 러시아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넘겨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017. 2. 7.

■ 유럽인권재판소 “러 정부, 탈북 노동자 최씨 강제송환 안돼”(연합뉴스)

-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오다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탈북자 최명복 씨가 일단 송환 위기를 모면하게 됨.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최 씨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 전까지 그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임.
- 최 씨를 돕고 있는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ECHR이 직접 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까지 러시아 정부가 최 씨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메모리알은 최씨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국내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추진하는 한편 ECHR에 최 씨 보호신청을 내는 등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음. 최 씨는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아들, 아내 등의 안전을 걱정해 한국행은 거부하고 있다고 메모리알은 전함.

■ 러시아, 탈북자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송환 중단해야(연합뉴스)

- 한국의 민간 대북방송협회가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오다 체포된 북한 노동자의 강제 복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7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짐.

- 강신삼 대북방송협회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방송협회는 한국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탈북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함.
-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2월 ‘불법 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북한이 러시아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북한인권 고발 다큐 ‘퍼스트 스텝’ 10일 국내 첫 시사회(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탈북민 활동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 스텝’이 오는 10일 첫 국내 시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짐.
- 영화를 연출한 탈북민 출신 김규민 감독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인권 장편 다큐멘터리 ‘퍼스트 스텝’이 10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브로드웨이(신사) 2관에서 첫 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함.
- 영화는 지난 2015년 4월 27~5월 2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2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한 탈북민 24명의 활동을 기본 내용으로 삼고 있음.

■ 남북피해단체들, 184명 통합 명단 발표(자유아시아방송)

- 남한의 남북자 가족단체들이 그동안 유엔에 개별적으로 제출해왔던 남북자 명단을 통합해 7일 발표함.
- 남북자 명단 통합 작업에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KAL기 납치피해자 송환을 위한 대책협의회’, ‘베트남전국군포로납북자가족회’ 등 네 개의 단체가 참여함.
- 명단에는 납북어부, 6.25 전쟁 납북자, 항공기 납북자 등 184명의 남한 국민의 이름이 올라있음.

2017. 2. 8.

■ 미 국무부, 탈북자 강제송환 보도에 “북한 난민 처우 깊이 우려”(미국의소리)

- 미국은 모든 나라가 자국 영토에서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들을 보호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무부가 밝힘.
-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애덤스 대변인은 특정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면서, 미국은 북한인권 상황, 그리고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또 미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2017. 2. 9.

■ 北 아동 노동착취 실태 유엔 실무회의서 논의(연합뉴스)

- 북한 어린이들의 강제노동 실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현지시간)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의제로 다뤄질 예정임.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뉴코리아여성연합, 갈렙선교회는 8일 사전회의 전에 배포한 성명에서 “북한은 강제노동과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노동착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이 단체들은 사전회의 실무그룹에 북한의 아동노동착취, 교육받을 기회의 차별, 제3국 내 탈북여성 자녀의 인권상황, 학교 내 차별, 건설전문 유사 군단체계인 ‘돌격대’의 아동 노동력 착취 등을 사전 브리핑할 예정임.

■ 영국 외무부 “북한 당국, 주민 기본 인권 계속 무시”(미국의소리)

- 영국 외무부는 8일 발표한 인권 우선대상국 2016년 하반기 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에도 계속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했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더욱 높였다고 밝힘.
- 영국 외무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30개 ‘인권 우선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고, 이후 6개월 마다 북한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2017. 2. 10.

■ 美국무부, 北노동자 해외파견 관행 좌시하지 않겠다(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를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함.
- 알리시아 에드워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노동자 파견을 겨냥한 권한은 압박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북한의 노동자 해외파견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힘.

- 앞서 지난해 3월 발동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는 미국 재무부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대해 제재하고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VOA는 설명함.

■ 유엔, 북한은 '잊힌 위기국가'...지원 절실(연합뉴스)

- 유엔이 북한을 '잊힌 위기국가'로 지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호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최근 북한을 외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기억해야 할 잊힌 12개 위기국가'(12 forgotten crises to remember)에 포함함.
- 유엔은 지정 배경에 대해 북한 주민의 60%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필수 의료 서비스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170만여 명의 어린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고 설명함.

■ 탈북자단체, 장성택 사건으로 1천명 처형·2만 명 숙청(연합뉴스)

- 북한에서 2013년 처형된 장성택 사건과 관련해 1천명 가까이 처형된 것을 비롯해 총 2만여 명이 숙청됐다고 한 탈북자단체 대표가 주장함.
-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성택 사건으로 노동당 간부 415명, 산하 기관 간부 300여 명, 인민보안성 간부 200명이 공개 총살됐다"고 주장함.
- 강 대표는 "처형된 간부 중에는 김일성 빨치산 동료 가족도 포함됐다"면서 "가족과 친척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등 장성택 사건으로 적어도 2만 명이 숙청됐다"고 덧붙였다.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2. 7.

- 탈북여성, '18호 수용소'내 인권유린 실태 첫 고발(연합뉴스)

- 탈북여성이 북한 '18호 수용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처음 고발해 관심을 끌고 있음.
- 평안남도 북창군 소재 18호 수용소에 갇혀있다 탈출했다는 박금옥 씨는 6일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수용소에서 탄광 일을 하면서 실수하자, 톱과 망치, 도끼 등으로 구타당했다"면서 "목숨만 겨우 붙어 있을 정도로 마구 구타했다"고 수용소 내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를 고발함.
- 북한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18호 수용소를 포함 평안남도 개천의 14호,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함경북도 명간의 16호, 함경북도 청진의 25호 등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짐.

2017. 2. 8.

■ 탈북 난민 1명 지난달 美입국...2006년 이후 212명(연합뉴스)

- 지난달 탈북자 1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미국 국무부 난민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20대 여성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해 서부 애리조나 주에 정착했다고 VOA는 전함.
-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총 212명으로 늘었음. 탈북자들은 미국 의회가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음.

5. 대북지원

2017. 2. 7.

■ 유니세프, 올 대북지원 1,650만 불 요청(자유아시아방송)

- 유니세프, 즉 유엔아동기금은 6일 올 한 해 동안 사용할 대북지원자금으로 미화 1천6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힘.
- 이는 지난해보다 150만 달러가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주로 지난해 두만강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는데 쓰일 계획임.
- 유니세프는 현재 북한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5살 미만 어린이 6만여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며, 북한주민 6만여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함.

2017. 2. 8.

■ **북한 1인당 식량배급량 400g…유엔 권장량의 67%(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8일 보도함.
-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진 스피른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힘.
- 지난달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배급량 370g보다 10% 가량 증가한 수치임. 그러나 유엔의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7%에 불과한 수준이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침.

2017. 2. 10.

■ **美 구호단체, 북한에 17억 원 상당 의약품 지원(연합뉴스)**

- 미국의 인도적 의료지원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북한에 150만 달러(약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용품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함.
-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북한에 보낸 8t 규모의 의약품과 구호용품이 오는 4월께 도착할 예정이라고 VOA에 밝힘.
- 포스트너 대변인은 지원 물품이 호흡기약과 당뇨병약, 비타민제, 옷 등 미화 150만 달러 상당으로, 평양 평안도·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함.